



# 안보전략논단

발행인: 신상태 | 편집인: 이화수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38(24-4) | 2024. 4. 1

인지전(Cognitive Warfare) 수행 방안  
김학민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변화 함의  
박용환

이념 혼동의 시대 안보의식 무엇을 어떻게 일깨워야 하나?  
박진호

## 인지전(Cognitive Warfare) 수행 방안

김 학 민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선문대학교 교수)

### 인지전의 도래와 대비의 필요성

현대의 전쟁수행 패러다임은 뇌 과학, 신경과학, AI, IoT, ICT 기술의 혁신적 발달에 따라 적 의지의 마비, 적의 지휘통제통신체계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인지전이 새로운 전쟁(전투) 수행 방식으로 등장하였다. 인지전은 상대국을 분리 및 분열시켜 상대국 스스로 아(我)에게 유리한 정책 및 전략을 결정토록 하는 것이며, 비물리적, 비살상적 수단(인터넷, 매체, SNS, AI 기술 등)을 통해 상대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조성하려는 것이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주민들의 인지를 마비시켜 러시아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무력충돌 없이 크림반도를 합병할 수 있었으며, 이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활용되었고, 미국(2016)과 프랑스(2017) 대선에도 활용된 것으로

로 밝혀졌다. 중국은 대만선거 개입과 여론조성은 물론 인접 국가를 대상으로 삼전(三戰, 여론전·심리전·법률전)에 의한 인지전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NATO, 중국, 러시아는 물론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도 인지전을 심도 있게 연구 중이다. NATO는 인지전의 필요성 논란 자체가 무의미하다면서 인지전을 전쟁수행 개념으로 수용하였다.

사이버공간과 SNS, 방송, 유튜브, 모바일 통신기기 등을 활용하는 인지전은 미래 전장을 주도할 것이며, 인지영역은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에 이은 제6의 영역이 될 것이다. 인지영역은 타 영역보다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국가안보 유지와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활동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 인지전에 대한 이해와 탐색

미국은 뇌 과학과 신경과학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인지의 역할과 특성, 의사결정 및 대비 방향을 연구 중에 있다. NATO는 인지전을 전쟁 캡스톤 개념으로 승인(2022)하였고, 탐색개념(2023) 및 최종 개념을 정립(2024)하였다. 중국은 적 지도자의 의도, 특성, 사고방식, 병력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여 3전을 통해 적의 의지, 정신, 심리를 공격함으로써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러시아는 반응적 통제(Reflexive Control)를 통해 적의 정치지도부, 군부, 사회의 인식, 감정, 의식을 조장하는 복합 방법과 기법을 활용한다. 즉, ①집중방해(Distraction), ②과잉정보제공(Overload), ③마비유도(Paralysis), ④소진강요(Exhaustion), ⑤각색(Staging), ⑥해체(Disintegration), ⑦진정(Calming), ⑧도발(Provocation), ⑨제의(Suggestion), ⑩ 겁박(Intimidation), ⑪압박(Pressure) 등을 활용하고 있다.

전쟁 수행개념으로서 인지전(Cognitive Warfare)은 인지신경과학, 인지개념과 인지기술을 적용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고유한 특성과 치명적인 힘을 통합적으로 구사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전투수행 방법이다. 전장은 5개 영역(Domain,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과 3차원(Dimension, 인간적·물리적·정보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의사결정자와 의사결정절차, 정보처리절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인지영역은 타 영역의 능력을 배가시키며 영향력과 의존도 증대는 물론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향후 더욱 중시될 것이다. 또한 인지전은 수행 주체가 다양하며, 영토 확보 및 지정학적 이익 대신 국가권력의 장악과 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고, 우호적으로 만든다. 이처럼 인지전은 정보작전이나 군사정보지원작전, 기만전, 사이버전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독창적인 새로운 군사 활동이며, 전략적 위상을 가진 전쟁(전투) 수행 방식으로 차별화된다.

따라서 인지전은 “상대의 인지영역에 접근하여 인지와 정보의 흐름을 제어함으로써 상대(국가, 사회, 그룹, 개인 등)를 아(我) 의도대로 생각 및 행동하게 하고, 전쟁수행 의지를 마비시켜 전쟁을 억제하도록 하고, 억제실패 시에는 전승(戰勝, 全勝)을

가능토록 하는 일련의 군사작전으로 일종의 정치문화심리전”이다. 정치문화심리전이란 “인간의 생각과 행동, 사회문화 현상 및 발전행태, 국가의 정치사상 및 체제에 영향을 주어 아(我)에게 유리하도록 변화시키기 위한 선전을 포함한 계획적, 의도적인 모든 활동의 총칭”을 말한다. 즉, 미국과 NATO에서 중시하고 있는 국가안보 및 정치적 관점에서, 그리고 북한의 정치문화 선전선동에 의한 국가안보에 위대한 인지전으로서 정치문화와 심리전의 결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지전은 마음과 행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지영역에 대한 전쟁으로서 상대의 의사결정자 및 의사결정 절차와 정보처리 절차에 영향을 끼쳐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마음과 행동이 유발되도록 유도·강요·처리하고, 상대방 결심의 시기를 상실·지연·오류토록 하여 스스로 와해·자멸·의지의 마비 유발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여건조성과 상대의 의도를 차단·저지·와해시키고자 하는 통합적인 모든 결정적인 시도를 통해 수행될 것이다.

인지전은 전·평시 모두 수행되고, 억제, 방어, 공격으로 구분되며, 억제 활동은 방호 및 예방 활동으로, 방어 활동은 역대응 및 복원력 증진 활동으로, 공격 활동은 결정적 활동 및 여건조성 활동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적(敵)의 인지전 수행 징후는 적시에 파악해야 하며, 아(我)의 인지공격은 은폐되고 적이 인지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징후는 보통 이상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은 패턴이 되는 직·간접적 행동이며 평판을 형성한다. 평판에 대한 인지는 수용과 순응(적응)을 가능하게 하고, 정서(감정)를 통해 신념과 의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의하고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적(敵) 스스로 결정한 정책 및 전략이 인지전의 영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야 하며, 깨닫더라도 대응할 수 없고, 대응하고 싶어도 무력으로의 대응이 불가하도록 해야 한다. 그 임계점을 정교하게 찾는 것이 중요하며, 적에 의한 인지전에 대응하고, 인지전 수행을 위한 통찰력이 구비된 정책 및 전략 전문가가 요구된다.

인지전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하고, 김정은 체제 무력화에 최적의 고도화된 새로운 전투수행 방식이다.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북한의 약점을 공격할 수 있고, 우리의 약점을 통해, 북한의 강점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북핵 위협의 점증과 사용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무력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다. 즉, 인지전을 통해 북한 체제를 와해시켜 전승(全勝), 전승(戰勝)할 수 있다. 전승(全勝)이란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완전한 승리를 말한다. 즉, 여건조성을 통해 결정적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며, 전쟁 이전에 전쟁에서의 승리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IT 강국으로서 디지털 기술과 활발한 인플루언서, SNS, 유튜브 활동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쟁이전에 전쟁에서의 승리가 가능하다. 전승(全勝, 戰勝)은 공개된 전장정보와 분권화된 전술 네트워크에 의해 결정되며, 권위주의 국가보다 자유민주 국가가 압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군과 향군의 구성원들은 인지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지전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인지전 수행 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어야 한다.

## 미래 인지전(Cognitive Warfare) 수행 방향

미래의 인지전은 뇌 과학과 신경과학의 발달에 따른 융합적 새로운 무기체계를 필요로 하며, 기존의 무기체계의 융합적 결합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인지전의 군사화(Militarization of Cognitive Warfare)와 무기화(Weaponization of Cognitive Warfare)는 새로운 개념과 형태의 무기체계 발전을 요구한다. 인지전의 군사화란 전장기능 분야별, 작전단계별 역량증진 및 작전보안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 안정적, 소극적, 비강제적 군사 활동과 은밀한 임무수행을 의미한다. 인지전의 무기화란 인지적 지휘통신통제, ISR, AI, 작전보안, 플랫폼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적극적, 강제적, 독립적 군사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무기체계를 의미한다.

외골격지지체(Exoskeleton)와 인지바이오테크놀로지(CBT, Cognitive Biotechnology)를 갖춘 기계화된(Mechanization) 인지증강 전사의 인지 역량이 극대화된 슈퍼 솔저는 미래의 전사로서 전장정보를 공유하면서 실시간 현장 상황 전송과 지휘통제를 통해 예측 전투와 통합전투를 수행하고 전투의지 마비를 통해 전승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슈퍼 솔저는 마이크로칩을 뇌에 이식해 인지력 및 지각력을 향상시키고, 뇌파를 통해 전투원 간의 통신이 가능하며, 요구하는 시공간에 드론을 활용하고, 원거리 및 야간 상황에서도 투시가 가능하며 향상된 청력도 구비될 것이다. 이러한 인지 기술의 발전은 칩, 빛, 알고리즘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Brain-Computer Interface) 기술 등으로 무장되어 활용될 것이다. BCI 기술은 가상 증강현실에서 기계를 조작하듯이 입는 슈트를 활용하거나 무인체계 조종이 가능하며, 생체능력 증강 기술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나날이 발전되는 첨단과학기술과 뇌 과학 및 신경과학, 나노기술의 융합적 발전은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변화 함의

박 용 환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동국대학교 교수)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15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의 14기 10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유사시 남한을 ‘평정’할 준비와 남북관계의 완전 단절을 지시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여기서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관계’로 규정하고,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主敵)’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을 헌법 조문에도 명기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정은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명기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인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도 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의 철거를 지시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북측 구간을 ‘회복 불가능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 놓을 것을 지시했다.

이와 같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북한 당국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과 민족화해협의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 대남협상 및 대화기구들이 해체되고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메아리’, ‘조선의 오늘’의 운영도 중단하고, 남파간첩에 지령을 보내던 대남 국영 라디오 ‘평양방송’의 방송 송출도 중단했다. 그리고 북한은 연초부터 미사일을 발사하며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현상을 타파하겠다는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수역으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하며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대남 적대감을 드러낸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처럼 대남 통일전선기구 및 매체까지 해체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통일정책까지 전

면 부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이 권력승계 후 곧바로 김정일의 유헌정치를 천명하고 자신이 선대들의 정통성을 이어 받은 후계자라는 것을 주장한 것에 비추어 보면 정면 배치되는 발언들이다.

김정은 총비서의 최근 발언과 북한의 군사행동에 관련하여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정은이 이처럼 남북관계를 완전 단절하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핵무력 고도화에 따른 자신감이다. 북한은 그동안 6번의 핵실험과 수십 회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핵무력이 완성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해 과학기술분야의 최대 성과로 정찰위성 발사 성공을 꼽고, 헌법에 국가핵무력 강화 정책을 반영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또 화성포-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화성포-18형 고체연료 ICBM 시험발사 성공과 전술핵공격잠수함의 진수, 정찰위성 발사 성공 등을 통해 이제는 한미연합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북·러 군사동맹 관계의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북한과 러시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구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지금까지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로 보낸 포탄이 컨테이너 총 2천여 개로 추산되며, 여기에 122mm 방사포탄을 적재했다고 가정하면 20만 발 이상, 152mm 포탄으로 가정하면 100만 발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무기 지원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으로는 위성 기술 지원, 핵 관련 기술이전 및 협력, 전투기 또는 관련 부품 지원, 방공시스템 지원, 노획한 서방 무기 및 장비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북한과 러시아는 2023년 9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러 관계는 냉전 시대의 동맹을 넘어서는 전면적·전략적·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북·러 군사협력의 발전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더욱 강경한 대미·대남 정책을 추구하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는 우리의 안보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대남정책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그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주국방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국과의 협력안보를 통해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최근 신설된 인도태평양전략, 쿼드, 오키스 가입 등을 통해 다자간 안보동맹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우리의 안보를 특정국가에 치중해 대비하는 것은 최근 국제정세를 고려해 볼 때 위험부담이 크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언제 도발할지 모를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비해 주변국들과 안보동맹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금년 들어 벌써 7회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김정은은 군부대를 현지 지도하면서 전쟁준비를 독려하고 있다. 앞으로 김정은은 한반도에서 대남군사도발과 위협을 지속하면서 정치적·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고 그 주도권을 장악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는 무너졌다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안보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북한의 다양한 군사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 이념 혼동의 시대 안보의식 무엇을 어떻게 일깨워야 하나?

박진호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안보, 외교, 통일 분야 세미나장에서 접하는 논쟁의 중심에 이념 문제가 등장하면 “이념 문제는 논외로 하고” 토의를 이어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지나치게 관대히 넘어가는 것이 타당한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한때 대학 강단에서 젊은 대학생들과 국가안보, 전쟁사 등을 강의하면서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이념 혼동으로 인한 몇 가지 안보의식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첫째, 6·25전쟁에 대해 다수 학생의 인식은 피를 나누는 형제끼리 서로 다툰 집안싸움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전쟁 배경에 구소련에서 내세운 김일성 괴뢰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동시에 북한을 단시간 내 장악하고 무력으로 한반도를 적화통일하려는 집요한 과정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 상당수의 학생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 이유를 찾아 보니 중등 교과서 내용에 6·25 전쟁은 압록강을 향해 청색 화살표로, 낙동강을 향해서는 적색 화살표가 한반도 지도 단 한 장에 함께 그려져 있었다. 지도 한 장 이외에 전쟁 배경은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1장으로 표현된 6·25전쟁 관련 지도에 관한 인식은 서로 싸운 전쟁으로 연상시켰다고 추측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전쟁사 과목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6·25전쟁 배경에 중점을 두고 남침을 위한 김일성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 3차례에 걸쳐 스탈린을 만나 남침을 약속받은 과정과 중공 모택동을 만나 전쟁지도지침과 지원 약속을 받은 과정을 상세히 알려줌으로써 6·25전쟁은 김일성이 주도적으로 남침을 기획한 전쟁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미군과 UN군의 참전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형성된 UN체제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82호에 따른 북한의 남침 규정과 이어지는 참전 승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정의롭고 합법적인 행동임을 구분하여 알려줄 필요가 있다.

둘째, 민족에 대한 감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국가정체성과 국가 가치의 혼동이 있다. 북한 핵미사일 시험이 끊이지 않아 현실적으로 국가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



조차 북한보다 일본을 더 적대시하여 GSOMIA 파기를 주장하거나, 반미를 외치며 THAAD 배치를 반대하는 사회적 흐름이 있었다. 여기서 문제는 첫째로, “남북한은 한민족”이라고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민족’에 대한 감성적 분위기를 조성해서 사활적 가치인 국가 생존 문제와 통일에 대한 가치의 우선순위 혼동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통일과 국방 문제에 학생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조차 그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문제의 본질은 국가가치, 즉,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제정치 상황이 급변하는 시기에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국민의 가치가 모여 형성된 국가 가치이자 우리의 주권이다. 반면 북한은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임을 확연히 일깨워야 한다. 학생들에게 남북한 헌법 전문(前文)과 서문(序文)을 비교해서 읽도록 하고 소감을 과제로 부여했더니 단순한 과제였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놀라웠다. 이것을 계기로 북한에 대해 갖고 있던 감상적 인식을 전환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특히 북한 헌법 서문에 등장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핵보유국”, “사회주의 헌법은 ~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다.” 등의 구절을 접한 학생들의 인식은 과거와 달라졌다. 북한 헌법은 마치 17세기 절대왕정 국가 중 왕권신수설을 신봉하는 루이 14세의 발언 “짐이 곧 국가다(L'État, c'est moi.)”와 다를 바가 없다. 남한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북한의 주권은 백두혈통 지도자 김정은에게 있음을 명확히 깨우쳐 줄 필요가 있다.

셋째, 민족과 국민에 대한 개념이 혼동되어 민족이 더 소중하다는 막연한 생각을 일깨워야 한다. 소위 우리민족끼리라는 제목으로 북한과 교류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북한의 노력에 성과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민족과 국민의 개념의 혼동이다. 민족은 언어, 사회 문화적인 동질성을 갖는 집단인 반면 국민은 법에 기반한 가치를 함께 하는 집단이다. 미국의 국민은 인종, 언어, 풍습이 모두 달라도 한 국민이다. 여기서 한민족인 북한이 우리에게 더 가깝다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남북한 주민은 서로 다른 국법의 지배를 받는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이고, 북한은 조선인민민주주의의 헌법이다. 북한 헌법의 제목은 인민과 민주주의의 제목을 갖고 있으나 서문에는 분명히 특정 개인의 국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은 같은 민족이지만 법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념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2022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국가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은 작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3년간 버텨내고 있는 이유 중 무엇보다 국민의 전쟁 의지 결집이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서전인 사이버전을 극복하고 온 국민이 단결한 모습은 현대국가의 모범적 사례다. 우리도 과거 6·25전쟁을 통해 유사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제 국가 가치와 이념의 혼동으로 국민의 결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 역할이 절실하다. 과거 전쟁의 역사를 고찰한 국제정치학자 스토우 싱거(John G. Stoessinger)는 침략전쟁을 결심하는 지도자의 여러 착오 요소 중 적 지도자의 능력과 적 능력에 대한 오해로 첫째는 상대국의 국력과 군사력을 과소평가 하고, 둘째는 타국가의 전쟁 개입 가능성을 무시하는 경우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상대 국민의 전쟁의지를 경시할 때 발생한다고 한다. 이런 교훈을 돌이켜 특히 우리 제대 군인은 군에서 안보 교육 과정을 통해 접한 지식을 최신화 하고 심화해서 안보 이념 교육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후배들과 자손들이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 여건에 맞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 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02)499-0201/korvass0201@naver.com